"문화재 법안 불교계와 협의할 것"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조계종 지관 스님 예방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3월 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문화재 관련 법안은 불교계와 잘 협의해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강 대표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이 같이 밝혔다.

강 대표는 "최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불교계와 사전 협의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얘기를 들었다"며 "앞으로 문화재 관련 법안을 다룰 때는 불교계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표는 "숭례문 화재로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문화재 관련법을 정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최근 '목조문화보존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문화재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불교계에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지관 스님은 "불교계에는 부석사 무령사전과 봉정사 극락전, 해인사 팔만대장경판 등 소중한 목조문화재가 많이 있다"며 "이들 문화재에 대한 방재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호법부장 정만 스님도 "전국 67개 사찰의 1년 관람료가 300억 정도이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원비용이 250억원 수준"이라며 "하지만 조계종이 컨설턴트에 의뢰해 67개 사찰의 문화재 유지비용을 산출한 결과 매년 8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문화재 보수 및 관리 비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만 스님은 "불교계가 문화재관람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인 만큼 문화재가 처한 현실을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글=여수령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태고종 해외특별교구장
미국서 교황 만난다

태고종 해외특별교구 종무원장인 종매 스님이 4월 17일 미국을 방문하는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알현한다. 종매 스님은 이 자리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교황에게 선물하는 작은 범종을 전달하고 교황이 주재하는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종매 스님은 현재 가톨릭 예수회 소속의 로욜라매리마운트대학의 종교학과 교수다. 혜철 충청지사장

실천승가회 대표 법안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이하 실천승가회) 신임대표에 법안 스님(서울 금선사 주지)이 선출됐다.

실천승가회는 3월 3일 서울 수국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법경·도문·정휴스님을 부대표로, 가섭스님을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외에도 지선·청화스님을 상임고문으로, 성관·효림스님을 명예대표로 추대했다.

김주일 기자

범어사 주지후보 정여 스님

조계종 제14교구 본사 범어사 주지 후보에 부산 여여선원장 정여 스님이 선출됐다.

정여 스님은 3월 6일 열린 산중총회에서 272표 중 141표를 얻어 23대 주지후보에 선출됐다. 함께 입후보한 상운 스님은 125표를 얻었고 광탄 스님은 득표하지 못했으며, 덕륜 스님은 이날 오전 후보를 사퇴했다. 투표에는 총 347명의 선거인단 중 272명이 참석했고 6표는 무효처리 됐다. 하성미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국고보조금 빼돌리고 뇌물 로비에 법정공방까지…

부끄러운 불교계 현주소

국고보조금 60억원 편법 취득

태고종 태고종은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국고보조금을 편법으로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오광수 부장검사)는 2월 26일 가짜 서류를 만들어 국고보조금 60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적용해 운산 스님을 불구속 기소했다.

운산 스님은 2004~2005년 신도와 교단 산하 사찰 주지로부터 잠깐 돈을 빌려 통장에 60억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꾸민 뒤 이를 문화관광부에 제출해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건립 국고보조금 60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사비 102억원을 123억원으로 부풀려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해 문광부에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태고종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종단의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부담금 60억 원을 불가피하게 채워야 하는 사정 때문에 생긴일"이라며 "이미 지난 1월에 원장스님께서 개인적인 횡령 등의 문제는 없다고 검찰 수사결과 확인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직 총무원장이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태고종은 3월 5일 원로 및 중진 스님 1백여명이 모여 연석회의를 열고 수습에 나섰다. 종정 혜초 스님의 유시 발표와 현 총무원장 체제 유지, 검찰 고발자 퇴출을 통한 종단 조직 재정비 쪽으로 해결 방향을 잡았다.

운산 총무원장 스님도 "일방적 판단으로 의혹만 가중시켜 태고종의 명예를 실추시킨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종단 구성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리 하겠다"고 밝혀 향후 탈종 사태와 종단 내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는 보우승가회 회장 도산스님이 ▲도법사 매각 ▲영종도 용궁사 토지 일부 매각 ▲2004년도 이월금 중 26억6천만원의 행방 등 총 11개항을 총무원장 운산스님에게 질의했으며, 운산스님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계속 조사하겠다는 강경한 뜻을 밝혀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또한 보우승가회 소속 대각스님이 유죄 판결시 총무원장 퇴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자, 일부 스님들이 회의장 밖으로 밀어냈으며,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대각스님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불교계의 대표적 종단들이 혼란에 휩싸였다. 태고종과 천태종은 총무원장 스님이 불구속 기소 되는가하면, 진각종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현직 총무원장의 법정 공방이 아직도 계속 중이다. 이런 때아닌 홍역에 불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계 일각에서는 불교의 명예가 추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설까지 대두되고 있어 긴장감이 감돈다.

탈북자지원사업권 따려 로비

천태종 천태종도 탈북자 지원 사업 민간 이양을 둘러싼 뇌물 스캔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월 20일 통일부 산하 하나원 원장 이충원씨가 전격 구속된데 이어 이씨에게 금품로비를 벌인 총무원장과 부장급 스님 등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구속된 前 원장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종단에서 1억 원을 직접 송금한 증거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탈북 주민인 새터민의 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통일부 산하 하나원은 탈북자가 1만명이 넘어서면서 탈북자 지원사업 일부 분야를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그동안 여러 민간단체에서 사업권 획득을 위한 치열한 로비를 벌여 온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이씨는 1억원은 빌린 돈이고, 직무관련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천태종이 체탈 도첩한 모스님의 고소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 문제가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검찰 조사결과, 천태종은 이 씨에게 건 낸 1억 원을 제외하고도 탈북자 민간사업권 수주를 위해거액의 불법 로비자금을 추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천태종이 이 돈을 앞서 구속된 영통포럼 사무총장 노모씨에게 전달했고, 노씨는 하나원장 이충원씨 뿐 아니라 다른 관련기관에 로비를 하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천태종은 또 로비를 통해 탈북자 지원사업권을 따내면 탈북자 정착금을 받아 주거임대사업을 하고 정착촌을 개방해 관광 사업을 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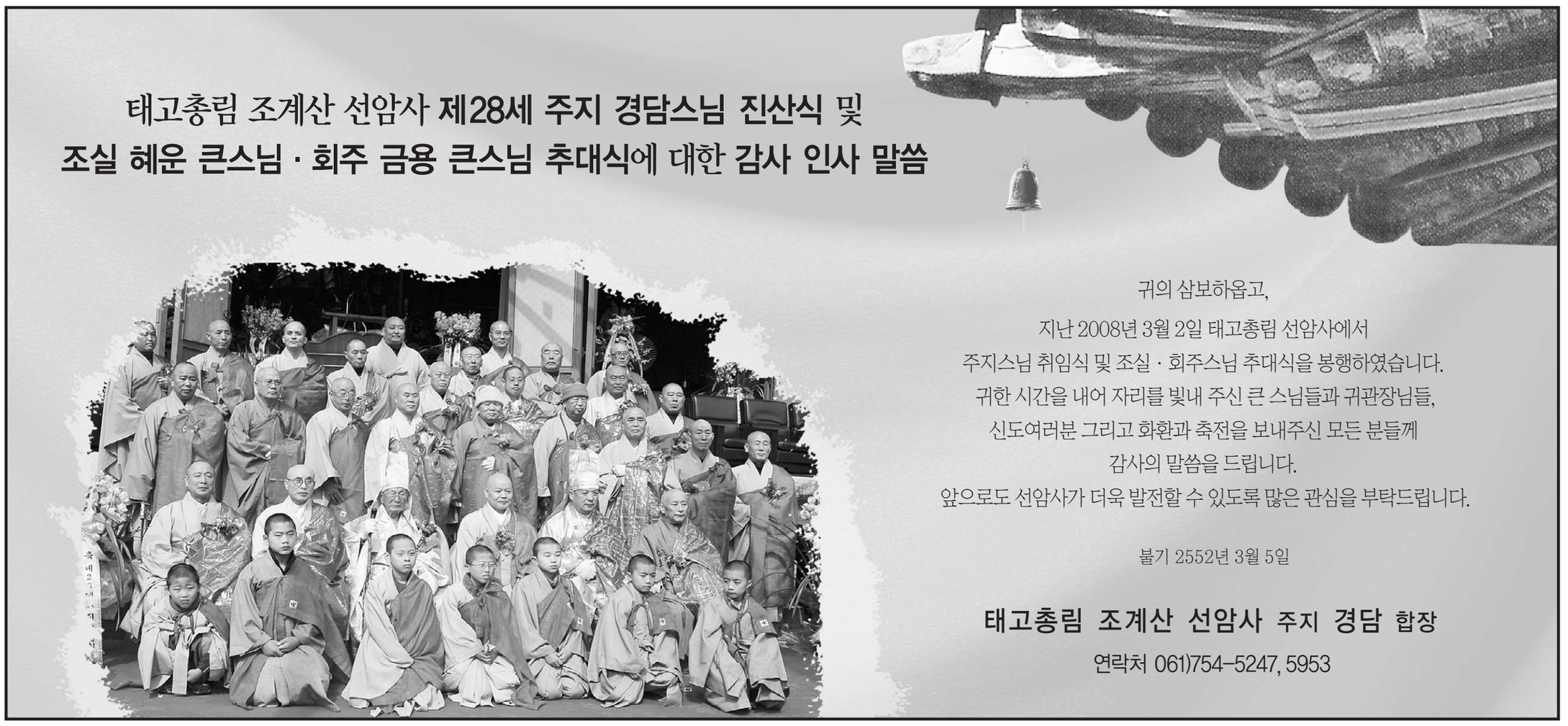
전·현직 통리원장 세력다툼

진각종 지난해부터 불거진 진각종 전현직 통리원장의 갈등과 대립이 끝을 맺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다.

학교법인 회당학원은 지난 1월 이사장 혜인 정사와 이사 보훈 정사를 해임시켰다. 혜인 정사가 前 통리원장 효암 정사와 함께 지난 12월 28일 종단으로 부터 체탈 도첩을 받아 이사 자격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혜인 정사 측은 즉각 반발, 교육부에 상급기관의 승인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장에서 해임시킨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진정을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2월말 공문을 통해 "이사장과 해당 이사가 교직자에서 채탈 도첩돼 임원 자격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라 생각되며 교육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며 "다만 이사장의 해임은 주요 안건으로 상정시켜 되는데 지난 이사회에서는 기타 안건에 부쳐 문제가 되는 바 추후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재소집해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효암 前 통리원장측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22일 현 원장측이 효암, 혜인, 진산 정사 등 세 명의 스승을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한 것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며 "스승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즉각 철회돼야 하며 회당학원 이사장 등 원래 맡고 있던 직위도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앞으로 진실이 밝혀 질때까지 계속 상급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감부장 정훈 정사는 "이들에 대한 징계는 소송과 상관없이 스승이란 심출가자로서 세속적인 일에 초연한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물질에 전도돼 지나치게 세속적인 일에 집착하는데 대한 경책"이라며 철회 가능성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쳐 사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진각종은 지난해 12월 종법과 전통을 무시하고 종단 기강을 해쳤다는 이유로 효암 前 원장에 대해 품수 7급 강등, 공권정지 10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7급은 초임 스승에게 부여되는 급수로 효암 前 원장의 이력으로 볼 때 사실상 승적 박탈이나 다름없는 불명예 강등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